광주일보·중앙일보·한국사회학회 공동

■ '중산층의 역할과 사회발전' 2차포럼

광주일보와 중앙일보는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중산층의 역할과 사회발전' 제2차 포럼을 가졌다. 이날 포럼은 중산층의 정치 통합적 역할을 분석하고, 중산층을 합리적인 '조율'과 건전한 '참여'의 주체로 유도할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호기(연세대 사회학과), 정철희(전북대 사회학과), 초의수(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김영태(목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또 윤상철(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조대엽(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전영기 중앙일보 정치부문 부장이 세션1의 지정토론자로, 장세훈(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이명진(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조경완 광주일보 논설위원이 세션2의 지정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포럼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요약한다.

"보수·진보 아우르는 사회통합 주체돼야"

■ 김호기 연세대 교수

"국가 비전 불확실성이 중산층 쇠퇴 가속화 불러"

■ 정철희 전북대 교수

"좌·우 구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 초의수 신라대 교수

"사회복지 참여의사 높고 맹목적 지역주의 비판적"

■ 김영태 목포대 교수

"정치적 정체성 약해 시대에 따라 다른 선택"

광주일보와 중앙일보는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중산층의 역할과 사회발전'에 관한 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주제발표 요약〉

◆중산층의 이념 성향(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한국의 시민사회는 이중적 속성을 갖고 있다. 가족주의와 연고주의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반면 사회운동에서는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통주의와 근대주의, 탈근대주의가 공존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산층은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이 혼재돼있다. 상층 중산층은 정치적으로 보수주의에 기울며 하층 중산층은 진보주의에 기우는 경향이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중산층의 미래에 대한 토론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국가 비전이 불확실하며 이런 불확실성이 중산층의 쇠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보수적 개혁이든, 중도적 개혁이든, 진보적 개혁이든 세계화와 양극화에 대처하는 대안 모색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신중간계급, 새로운 정체성(정철희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신계급은 권위주의를 주도하는 계급화 함께 기존의 좌우 구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균열을 만들어갈 중심세력이 될 것이다. 신계급은 새로운 정치적 균열의 결과로 좌-우 구도를 뛰어넘는 리버테리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세계적 수준의 신정치의 파도와 새로운 정치적 균열이 한국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가정한다. 통계분석 결과 중산층의 일부인 신계급은 여타의 계급위치에 비해 리버테리언 성향을 뚜렷이 보인다는 가정이 대체로 지지됐다.

◆중산층,지역주의 해소의 단초(초의수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올 1월 전국 16개 시도 2천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구중간계급(자영업·농어민)과 화이트칼라(사무·기술, 전문·자유직), 블루칼라(판매·서비스, 기능·작업직) 등 세가지 계층이 지역주의에 각각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했다. 개인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능력이 51.2%로 가장 높지만 혈연(26.7%), 학연(12.6%), 지연(9.5%)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수도권·지방, 영·호남, 소지역간 갈등에 대해서는 화이트칼라가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맹목적이고 패권적인 지역주의에 대해 화이트칼라가 가장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귀속의식 약화, 사회불안·갈등으로 이어져

◆중산층의 투표 성향(김영태 목포대 정치행정학과 교수)=1992년, 97년, 2002년 세차례의 대선 결과를 분석했다. 한국선거연구회의 유권자 의식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실제 투표율과는 차이가 있다. 중산층은 구중산층(농어민, 판매·서비스 등)과 신중산층(전문직, 공무원, 사무직 등)으로 분류했다.

과거 세차례의 대선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산층의 정치적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다. 즉 중산층은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정치적 성향을 갖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정치가 서구의 계급 정당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토론요약〉

◇중산층 감소,정치적 갈등 확대=김호기 교수는 "중산층은 내부에서도 보수와 진보의 성향이 혼재해 나타나지만 온건 보수 또는 온건 진보적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좌우 대립에서 타협이 가능한 구역"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한때 전체의 90%까지 육박하던 '나는 중산층'이라는 응답은 IMF 경제 위기 이후엔 70% 안팎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중산층 귀속의식의 약화는 사회 불안과 정치적 갈등의 확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윤상철 한신대 교수도 "중산층은 사회 계층 구조로 보면 말 그대로 '중간층'으로,계층끼리 대립하며 병목 현상이 발생할 때 이를 해소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비유했다. 윤 교수는 "그런 면에서 중산층은 가운데에서 선택을 해줘 결정적인 파국이나 붕괴를 막는 지렛대"라고 했다.

나간채 전남대 교수는 "따라서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는 약화되는 중산층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중산층은 현실 해결을 원해"=김영태 목포대 교수는 한국선거연구회의 유권자 의식 조사를 자료로 해 "1992년부터 2002년까지의 대선 투표를 분석해 보면 우리 사회의 중산층은 보수 후보 또는 개혁 후보로 일관된 정치적 성향을 보이며 표를 던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조대엽 고려대 교수도 "중산층은 군부독재 정부에선 산업화에 적응하는 보수 성향을 보여 왔다가 6월 항쟁 국면에선 '넥타이 부대' 등의 화이트 컬러 중산층이 대거 민주화를 지지했다"고 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이런 중산층의 특성을 '이념적 정체성이 없다'거나 '이중적인 정치 성향을 보인다'고 배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조경완 광주일보 논설위원은 "중산층에게 개혁과 보수 어느 한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중산층의 모순된 입장 때문에 다양한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완충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은 "그래서 중산층을 회색 지대라고 한다면 이 회색은 기회주의가 아니라 통합의 색깔"이라고 했다.

세계화·양극화 대처 방안 모색 이뤄져야

◇정치의 몫=토론자들은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사회 발전의 일꾼으로 움직일 비전을 제시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중산층 해체를 막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안전망을 구축하는게 경제의 몫이라면 중산층이 사회의 통합 세력으로 역할하도록 움직이는 것은 정치의 몫이라는 것이다.

김호기 교수와 전영기 중앙일보 정치부문 부장은 "한국의 중산층이 흔들리는데에는 국가가 비전을 보여주는데 실패한 것에도 크게 기인했다"며 "정체 상태에 도달한 우리 사회가 현실을 어떻게 돌파할지를 제시하는 것은 결국 정치의 몫"이라고 했다.

김순흥 광주대 교수도 "중산층은 이에 걸맞은 사회적 의무(노블리즈 오블리제)가 있어야 사회 전반의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중산층의 의식의 발전도 앞으로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康-금 서포터스·吳-정수기 광고 "선거법 위반"

여야 서울시장 선거 '맞고발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상대당 서울시장 후보 진영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이나 선관위에 고발하거나 고발 방침을 밝히면서 선거전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선거'로 이끌겠다던 양측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서울시장 선거전이 법정공방도 불사하는 '네거티브 선거' 양상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4일 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의 팬클럽 성격의 자원봉사모임인 '금 서포터스'가 우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일인 지난 2일 금 서포터스 문구가 적힌 티셔츠와 손수건을 각각 100장씩 제작·판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금 서포터스를 서울중앙지검과 중앙선관위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정현 당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일까지도 온라인에서 티셔츠는 7천원, 손수건은 3천원에 각각 판매했다"며 "이는 후보자를 상징하거나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87조와 90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지난 12일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정수기 CF'가 선거일 90일 전부터 본인이 등장하는 사진, 동영상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제93조에 위배됐다며 오 후보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재하 당 법률구조위원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 후보의 당시 지위와 언행으로 판단해볼 때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만약 이 부분이 기소된다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진만기자 man21@

지금 '영변 원자로'는 가동중!

글로벌시큐리티가 공개한 북한 영변의 5MW 원자로 위성사진. 지난 2003년 5월 5일 촬영된 위성사진(왼쪽)에는 원자로 건물 주변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으나 지난 1월5일 촬영된 사진(오른쪽)에선 차량과 컨테이너가 세워져 있는 게 드러나 한창 가동중임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美 군사지 위성사진 공개

미국의 군사전문지인 '글로벌시큐리티'가 최근 한창 가동중인 북한 영변의 5MW 원자로 위성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lobalsecurity.org/wmd/world/dprk/yongbyon-5.htm)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올해 1월5일 촬영한 위성사진 4장과 2004년 9월29일 촬영한 2장 및 2003년 5월 5일, 2000년 2월 22일 각각 촬영한 1장씩 등 모두 8장이다.

글로벌시큐리티는 지난 1월5일 촬영한 영변 5MW 원자로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비교하며 무엇이 달라졌는 지를 함께 설명했다.

지난 1월5일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월29일 위성사진 촬영 때 비포장도로였던 원자로 주변의 도로가 포장된 것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원자로 시설 굴뚝에서 분출되는 수증기의 양도 지난 2004년 9월29일보다 훨씬 많았다. /연합뉴스